어설픈 인사에 어수선한 광주시

컨벤션뷰로 대표 국정원 출신 선임과정 잡음 정무특보 내정자 의혹 제기에 임용 결정 미뤄 노인건강타운 신임 본부장은 과거 범죄경력도

광주시가 매끄럽지 못한 인사로 어수선하다. 광주컨벤션뷰로는 최근 대표 이사를 선임하 면서 석연치 않은 서류심사 기준을 적용해 일 부 공모자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광주시 정무 특보 내정자는 각종 의혹이 제기돼 선임이 미 뤄지고 있다. 이달 초 선임된 빛고을노인건강 타운 본부장은 뒤늦게 범죄 이력이 드러나 논 란을 벌였다. 또 행정부시장은 4개월 넘게 인 선이 지연되면서 공무원 조직이 안정감을 찾 지 못하는 분위기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연간 국·시비로 17 억원 안팎을 지원받는 (사)광주관광컨벤션뷰

로는 지난 21일 국정원 간부 출신인 이지훈씨 를 대표 이사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뷰로는 26일 이사회 총회인준을 거쳐 대표이사를 최 종 임명할 계획이다. 뷰로 대표이사는 연봉만 7400만원에, 한달 평균 50만원 정도의 업무추 진비도 지급된다.

하지만 뷰로측이 대표이사 공모 과정에서 1 차 서류전형(17일)을 통과한 특정인을 이례적 으로 면접심사 당일에 갑자기 탈락시키는 바람 에 그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면접 심사일을 20일에서 21일로 연기해 의혹을 사

뷰로측은 뷰로 이사이기도 한 김홍주 광주 관광협회 회장이 지난 3월 초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 이사회의에 참가해 공정성 논란이 있는 만큼 결격 사유가 있어 탈락시켰다는 입장이 다. 하지만 이는 공모규정에 없는 기준인데다, 1차 심사를 통과한 후보를 면접심사가 아닌 공 모과정에서 탈락시킨 것이 오히려 절차상 문 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측은 "문제가 있다면 서류전형 또는 면접에서 탈락시키면 될 일을, 면접일까지 미 루면서 탈락시킨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반발

광주시는 또 지난 13일 새 정무특보 최종합 격자로 이혜명씨를 발표해 놓고도 임용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시는 신원조회 등 모든 채용절차를 마무리 했지만, 갑자기 이씨의 전력과 여론 추이를 살 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광주시에 피 력한 상태다.

광주시는 최근 노인건강타운 본부장의 과거 범죄경력 등이 논란에 휩싸인 탓에 인사에 매 우 신중한 태도다.

건강타운 본부장은 지난 1998년 순천대 총 장에게 2000만원을 주고 전임강사가 된 혐의 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 이 있는 데도, 광주시는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며 최종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고위 행정관료 출신이 맡아 온 광주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에 현 오형국 부시장이 임명되지 못한 점도 놓고도 말이 많 다. 지금까지 상근 부회장직은 대부분 시장과 상공회의소측의 협의 아래 행정부시장급이 임 명된 것이 관례였다. 이는 시장이 최고위 공무 원인 부시장을 우대함으로써 공조직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상징적인 하나의 인사로 받아들 여졌기 때문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해외연수 중 외국 공항서 추태 영광군 의원 2명 징계 받는다

해외연수 중 외국 공항에서 심한 말다툼을 벌여 큰 물의〈광주 일보 18일자 6면〉를 빚은 영광군 의원들이 징계를 받게됐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20일 사과문을 내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 키고 군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의회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 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 회가 되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며 "올해 해외연수를 모 두 취소하고 의정연수도 공공기관 연수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영광군의원 2명은 지난 13일 해외연수를 나갔다가 귀국길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험악한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으 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공항경비대의 조사를 받고 풀려나 비난 을 받았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kwangju.co.kr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풀리나

전남도·정부, 25일 여수서 끝장토론회

수산자원보호구역,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된 전남 의 섬·해안 등에 대한 규제 개혁 방안이 논의된다.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민과 외지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오는 25일 여수엑스포 컨퍼런스홀에서 행정자치부 와 공동으로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 해소를 위한 '전남 규제 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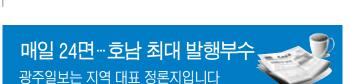
이번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이낙 연 전남지사, 중앙부처 관계관, 관련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 300 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섬·해안·어업 관련 35년간 해 묵은 규제가 논의 대상이 된다. 전남이 전국 섬의 65%인 2219개를 보유하고 있고, 전국 해안선의 45%인 6743km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 다. 또 1982년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전국의 53%가 전남에 집중돼 있으며, 1981년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육지 340.43㎢, 해상 2004.48㎢ 등 모두 2344.91㎢의 국내 최대 면적의 국립공원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주민이나 지자 체는 숙박시설 및 음식점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 제한은 물 론 대규모 지역 개발 프로젝트 추진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토론회가 그동안 불합리하게 묶인 제한지역의 지정 해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상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해소, 관광지 개발과 투자 유치 등 경제 활성화의 큰 걸림돌 제거 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동식 전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산 권 행사 장애 등 주민들의 생활 애로와 지역 발전의 장벽이 되는 규제를 해소해 전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불투명

中 외교장관, 日 역사인식 개선 강조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이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조기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3 국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 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년 만에 진행된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의 협력 복원 의지와 함께 그동안 3 국 협력의 정상적 진행을 가로막았던 일본 과 거사 문제가 여전히 장애물로 존재하고 있다 는 사실도 같이 확인됐다.

특히 중국이 일본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 보 인 태도는 중일 양자 관계의 빠른 진전을 기대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많다. 이번 회 의에 참석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방한 화두가 역사 문제라고 할 정도로 일본을 겨냥 한 '역사 공세'에 집중했다.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길'로 '정시역 사 개벽미래'(正視歷史 開闢未來·역사를 바로 보고 미래를 연다)'를 제시하기도 한 왕 부장은 3국 정상회의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건을 만 들어야한다"면서 일본의 역사인식 개선을 사 실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일 양자 관계와 3국 협력 문제를 사실상 분리한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여전히 두 사 안을 연계하고 있으며 조기에 3국 협력을 정상 화하는데 신중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른바 '아베(安倍) 담화'가 3국 정상회의 개 최 시기와 관련해 중요한 1차 분수령이 될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 기시 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회의 시작 전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잡고 있다.

"국세, 지방세 이양으로 지방재정 타개해야"

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확충 순천서 '네트워크 포럼'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 양, 복지 보조금 제도 전면 개편, 공동세 도입 을 통한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등이 시급하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에너지 저장 및 비축시설 등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하는 등 지자체들의 세원 발굴 노력도 필 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체 전면 개편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제3차 세미나가 지난 20일 순천시 순천만정원 국제 습지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세제의 근본적인 틀을 개 는 취지에서 ▲국세의 지방세이양 ▲복지보조 금제도 개편 ▲공동세 도입방안 신세원 발굴 등 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발표를 맡은 하능식 한 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대8에 그치고 있 는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지 역 정착성이 강한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및 특정장소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를 지방세 로 이양할 것을 주장했다. 하 연구위원은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국세와 지방

고 입장을 내놨다. '지방중심의 사회문제 해결 을 위한 복지보조금제도 개편과제' 발표를 맡 은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국비-광역시·도비-시·군비의 중층적으로 형성돼 있는 복지보조 금 재정관리 구조를 단층화시켜야 한다는 의 견을, '공동세 도입을 통한 자치단체간 재정격 차 완화방안' 발표를 맡은 이동식 경북대 교수 는 공동세를 활용하면 국세의 전면적 지방세 전환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 다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신세원 발굴을 통 한 지방세 확충방안' 발표를 맡은 정종필 지방 행정연수원 교수는 에너지 정제 저장시설 및 지역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생산시 설 등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방 안을 제시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세수 변화 및 지방교육세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분석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